

[ 종합 ]

정부, 미분양 대책 없이 수도권에 주택 300만가구 공급 발표

# ‘위기의 지방 건설’ 어떡하나

수도권 그린벨트 100km<sup>2</sup> 해제... 지방 부동산 활성화 외면

정부가 19일 수도권에 향후 10년간 300만 가구 공급 등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을 발표하는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건설·주택업계는 미분양사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경기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역 주택업계는 “지난 9월 1일 발표된 세계경제연안이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간 데다, 이번 주택정책 역시 지방의 재정자립과 부동산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 지방 건설사들의 역외 이탈, 아파트 신축물량 감소 등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그린벨트 100km<sup>2</sup>가량 해제하고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전국 50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4년과 이후 6년동안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담은 중장기계획으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지속돼야 하고 서민 주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 300만가구 공급을 위해 광역재정비(60만가구), 재건축·재개발(37만가구), 역세권개발(16만가구), 다세대·다가구(30만가구) 등 도시내 건설 확대방안이 강구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도시근교에도 주택건설이 촉진된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지역의 미분양 현상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아파트 신축물량에 영향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서 승인된 아파트 신축물량이 1건도 없었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A건설 대표는 “지난 9·1 감세안의 경우 지방에서 요구해온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보방안이 빠져있고 부동산 양도세 개편도 수도권 지역에 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면서 “이번 수도권 위주 주택정책이 현실화되면 지방 건설경기는 고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무주택자 없애겠다”

李 대통령, 임기 중 정부 주도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중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당청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주도가 돼서 이런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50만채 지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쓸모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민주거권 보호’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서민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李 대통령·丁 대표 25일 영수 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갖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청와대로부터 25일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오찬 영수회담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며 정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단독회담한 것은 지난 5월 20일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담 이후 4달만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강간수 기화제 정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문제도 오찬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경제에너지협력 미주 앗은 南과 北

1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경제에너지 실무회담에서 남측 황준국 북핵단장(오른쪽)과 북측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악수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이날 북한에 대해 핵 불능화 조치 즉각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광역경제권 정책, 호남 고립”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 성명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2일 전체 회동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호남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광산 갑)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전체 회동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등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고립’을 부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이날 회동에서 J-프로젝트 문제, 새만금 사업 추진으로 인한 광양항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영남 편중의 국가 산업단지 조성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호남 정책에 대한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 문제와 관련, 예산 반영 및 공기 단축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호남 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동에서 내년도 호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한나라당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회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회동을 둘러싸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지역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뤄지는 ‘정치적 뒷 북치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은 회동 자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국내은행 인수 경쟁 나설 듯

영국계 은행인 HSBC는 19일 한국의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HSBC는 이날 발표문에서 현재의 세계 금융시장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자산가치 등 모든 요소들을 감안해 론스타와 맺기로 한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 7월 말에 시한이 임박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연장하며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론스타와 가격 재협상을 벌여왔다. 당초 계약상 HSBC의 외환은행 인수조건은 지분 51%, 가격은 60억1천800만 달러(약 6조원)이다.

HSBC는 가격 재협상이 난항을 겪은데다 한국 정부가 언제 승인할지 불투명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제 금융시장마저 혼란에 빠

지자 외환은행 인수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HSBC의 인수 포기결정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10% 미만으로 쪼개 팔거나 국내 외에서 다른 인수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들은 외환은행 인수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강정원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하러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외환은행에 관심이 있다”고 밝혀 외환은행 인수전에 가세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시 설

### 신 성장동력, 광산업의 도약을 기대한다

광주시의 차세대 주력산업인 광(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광산업의 날’이 어제 4회째를 맞았다. 광산업 종사자와 관련단체 등은 기념행사 등을 통해 ‘제 3의 도약’을 다짐했다. 오는 연말 완료되는 2단계 집적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3단계(2009~2012년) 글로벌시장 공략을 선언한 것이다.

올 광산업의 날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2단계 사업의 성공으로 ‘국내 최고의 광산업 클러스터 형성’이라는 성과를 올렸고, 경제 불황을 타개할 선도산업으로 선정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기회를 마련했다. 기반 조성과 생산기지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광주의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집적·양적 성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광산업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광산업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

게 된다. 지난 1998년, 불모지인 광주에서 닦은 울진 이후 10년 만인 지난해 9천44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302개 업체에 5천180명의 종사원이 근무하는 광주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정부가 광산업의 ‘차세대 LED조명’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21세기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선정할 것도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내년에는 50개국 200만명이 참가하는 ‘광주 세계 광엑스포’가 열린다. 세계 광엑스포는 3천여명의 경제효과와 함께 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최소의 에너지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광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빛의 생산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치매관리 종합대책’ 차질없이 시행해야

보건복지가족부가 21일을 ‘제 1회 치매 극복의 날’로 정하고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검진·치료 등 치매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대응한다는 것이다.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는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40여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2%에 불과하다고 한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대부분 치매를 노망으로 치부해 숨겨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치매는 고령화사회와 핵가족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다. 치매는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켜 가정 파괴를 초래하기 쉽다. 치매 노인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가족들이 긴장하게 되고 노인을

누가 모시느냐를 놓고 가족끼리 반목하거나 헤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치매 노인을 요양원에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 요양시설이 절대 부족함에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가족 차원에서 치매 노인을 보살피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하다. 치매는 더 이상 가족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될수록 치매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치매와의 전쟁’이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치매 노인들이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가족들도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 정부는 치매가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치매관리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美·中 훈풍... 코스피 63.36P↑

환율 급락... 금융시장 안정 조짐

코스피지수가 미국과 중국발 견제에 힘입어 급등한 반면 원·달러 환율은 크게 내리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세를 보였다.

1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3.36포인트(4.55%) 오른 1,455.78에 마감됐다. 이날 오전 10시51분에는 선물가격이 5% 이상 변동한 상태로 1분간 지속돼 프로그램 호가를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 4번째로 발생했다. /최경희기자 choice@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소식과 미국정부가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중국 정부의 증시부양책이 이어지면 서 큰 폭으로 올랐다.

외국인이 이를 만에 ‘사자’에 나서며 1천 918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도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5천919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반면 개인은 8천247억원의 순매도로 차이 실현에 주력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내린 1,139.7원에 마감됐다. /최경희기자 choice@

## 北 “영변 핵시설 원상 복구 중”

테러지원국 해제 지면 비난

북한 외무성은 19일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발표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진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북한은)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얼마전부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10·3합의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본성이 다시금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바라

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며 우리대로 나가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변인은 영변 핵시설 원상 복구는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 10·3합의에 규정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의 핵검증 문제와 관련,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성원국도 아닌 우리에게 ‘국제적 기준’의 미명하에 가택수색을 강요해 보려는 미국의 기도는 언제가도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빛日만평

- 김중두



뽀족한 수가 없긴 없나보다

## “값 폭락 나주 배 전량 수매해달라”

나주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가 “명품 나주 배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21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김철수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명품 나주배의 안정적인 판로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가격폭락과 소비감소로 인한 배 재배 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kwangju.co.kr

시의회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과잉 생산된 배를 전량 수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와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나주에서는 배나주 과잉 조성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8만4천t으로 예년에 비해 12%가량 늘어났으며 소비감소까지 겹치면서 배값이 절반 이하로 폭락, 농가의 시름이 깊어졌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독신침·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명지 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